

分 析 과 展 望

통일에 대한 원불교 입장

〈第7號〉

원기 79년 7월 일

통일에 대한 원불교 입장

목 차

통일에 대한 원불교 입장	5면
1.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정세는?	6면
2. 독일의 통일국가 사례비교 연구를 통한 한반도의 분단 성격에 대한 규명은?	10면
3. 남북한 정치·문화·군사·경제에 대한 연구는?	14면
4. 각 종단의 통일 운동 경과는?	20면
5. 각 종단의 통일에 대한 제언은?	25면
6. 통일에 기여할 원불교인의 역할은?	27면

<참고문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원불교 입장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마다는 한생명에 근원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는 한포대속의 동포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동포사이라도 등을 돌리거나 단절된 관계가 있을 수 없거늘 하물며 핏줄을 같이한 형제자매의 한겨례라. 이 사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갈라 설 수 없는 천륜의 관계이다. 천륜을 갈라 놓는 죄악은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중죄이다.

지금 세계대세의 흐름은 전근대적 모든 올을 벗어나 대동화합의 역사를 빚어가는 과정이다. 이에 본교의 일원주의 이념은 이 시대가 가장 갈망하는 전생령 구원의 이념이다. 한핏줄로 형성된 이민족의 건국이념도 이화 세계, 흥의인간이다.

이에 남북통일은 같은 민족끼리의 결합이요, 온겨례의 열망이요, 국조단군을 비롯한 역대선령의 엄명이며 이시대에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당위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온겨례가 슬기와 정성과 역량을 풍쳐야 한다. 각 계층과 각 분야의 겨례 모두가 각각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분업적 역할이 충동원 되어야 한다.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피해라도 피하거나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

1) 남북한 국민 모두는 원래 생명의 근원이 하나입니다.

이념과 체제로 인해 하나의 생명인 민족끼리 서로 통하지 못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선악귀천·남북 민족을 막론하고 원래 생명의 근원이 하나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2) 우주에 존재하는 전생령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운 관계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이기에 서로 은혜와 자비로 열어가야 합니다.

3) 국민 모두 본래심을 회복하여 정신개벽 해야 합니다.

이념에 끌려 다니는 노예생활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인간의 본래심을 회복하여 이념을 활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생명에 근원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는 동포이니 이념에 가려진 생활이 아니라 이념을 넘어서서 서로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1.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정세는?

< 출처: 강정구, 세계사적 전환과 통일운동의 접합, 창작과 비평, 1992 >

· 세계사적 전환

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가사회주의의 개혁·개방은 소련의 몰락으로 귀결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를 가져오면서 세계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세계사적 전환은 ‘동서냉전의 해체’ ‘새로운 세계질서’ ‘역사적 대안으로서의 국가사회주의 한계’의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동서냉전의 해체

1945년 2차세계대전이 거의 마무리 되려는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소련중심의 사회주의체제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체제 양대 체제간의 모순과 대립이 적대적인 형태로 표출된 동서냉전은 이후 거의 50년 가까이 세계질서를 규정해왔다. 특히 한반도는 이런 세계적 수준의 체제모순이 분단모순과 중첩되어 냉전이 열전으로 변한 한국전쟁을 겪을 정도로 결정적인 규정력을 받아왔다. 이러한 냉전이 소련의 몰락으로 해체되어 세계는 탈냉전을 맞이하게 되었다¹⁾.

그러나 이 탈냉전은 양체제간의 접목과 상호결합에 의한 냉전극복이 아니라 한 진영의 몰락으로 이루어진 불균형적인 탈냉전이었다. 따라서 한쪽 진영의

1.) 이 기간을 커밍스는 대략 20년 정도로 보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 「세계사 속의 한국전쟁과 통일한국」(백낙청과의 대담), 『창작과비평』 1992년 봄호.

기존 냉전구조를 상존시킨 자본주의체제의 지도국들은 그들의 지향을 전세계적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새 세계질서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강요된 새 세계질서 속에 가장 희생을 치르게 된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사회주의의 지원을 받고 있던 제 3세계 민족해방세력인 리비아·이라크·쿠바·북한·팔레스타인 등이다.

또한 잔존 사회주의국가들은 기존의 양대 체제의 한 진영인 독자적인 세계체제 지향이 아니라 단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통합되는 통합체제 지향적인 생존전략을, 즉 개혁과 개방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었다. 이 생존전략은 자본주의체제의 위협에 직면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강요된 선택이라는 단독요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국가사회주의의 역사적 한계 때문에 시장기제를 수용한 시장사회주의로의 개혁 자체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잔존사회주의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세계질서

탈냉전을 계기로 자본주의 진영의 종주국인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이 ‘새로운 세계질서’는 미국을 초극으로, 일본과 유럽을 보조극으로 삼아 전세계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합할 것을 지향하는 세계질서이다. 이러한 세계질서 구도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희망사항이지 앞으로의 세계질서가 미국의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은 무소불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군사적인 지배국은 될 수 있지만 쇠퇴하는 경제력, 내부모순의 격화, 상실된 도덕성 등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초강대국의 지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한 시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대국으로 성장할 일본과 유럽 간의, 즉 제국주의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세계질서는 3극체제로 이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패권주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질서’ 또는 단극세계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새로운 세계질서 하의 미국의 행위유형은 미국이 이미 경제적·정치적 지도력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군사력으로 메우려는 무력의존적인 대외정책이 될 것이다. 이 무력의존적인 세계질서의 핵심은 92년 3월 8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미국 국방계획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세계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두 달 만에 수정을 했다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어디 까지나 이 지침에 기반하여 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요 내용은 초강대국 출현 불허용, 독일·일본 도전행위 방지를 위한 집단안보체제, 유엔 이용과 탈유엔의 독자행동 동시 추구, 군사력의 효율적 재편성 등이다. 또한 앞으로 10년 사이에 예상되는 ‘7개 분쟁예상지역 대비 씨나리오’에서 제 3세계가 다섯 항목, 그 중에서도 한반도가 두 항목이나 선정된 것은 미국이 군사력의 대상을 주로 제 3세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 지배할 미국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도는 기존의 냉전적 물적토대와 제도의 상존, 경제·정치적 지도력 상실 때문에 무력의존적이 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긴장유지용 ‘적’ 만들기를 지속할 것이며, 그 대상은 주로 북한과 같은 민족자주 지향적인 제 3세계 국가들일 것이다.

3) 역사적 대안으로서의 국가사회주의의 한계

이제까지의 역사적 경험은 국가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역사를 진보적으로 이행시킬 역사적 대안으로서 적실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생산력 수준에서 국가사회주의는 외연적 성장단계에서 내포적 성장단계로의 이행에서 이행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생산의 정체성을 떠었다. 중앙계획경제에서 구조적으로 야기되는 연성예산(softbudget)의 문제점으로 인한 자원과 노동력의 만성적 부족, 생산성 저하, 일상용품의 품귀현상 등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행기적 위기를 모든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이 겪게 되었으나 아직 어느 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둘째, 계급관계의 청산에서도 조직재와 기술재를 기반으로 한 관료 및 지식인 집단이 지배계급화되어 계급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보다는 완화된 형태지만 착취관계가 잔존하였고, 또한 재생산되었다.

셋째, 전적으로 중앙계획경제에 의존하는 국가사회주의는 의사결정의 독점을 가져와 비민주성을 야기하고 있다. 중앙계획경제는 중앙권력의 집중을 가져오고, 중앙권력 집중은 의사결정의 중앙독점을 가져와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안전장치가 부재하여 독재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조건을 갖게 되었다.

비록 국가사회주의가 계급착취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능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력의 발달과 민주화에서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에 헝가리와 중국의 국가사회주의 개혁의 방향인 시장기제의 활용, 사적 소유의 확대, 경제의 도입, 기업의 자율성 확대, 시장논리에 따른 기업·개인의 경제적 ‘합리화’ 행위 권장 등을 특성으로 하는 시장사회주의가 역사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장사회주의가 단기적으로 국가사회주의의 병폐인 생산력 침체를 완화한 공적은 인정되지만 아직 이것을 역사적 대안으로 상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이러한 시장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국한되고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진 후 다시 국가사회주의로 회귀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적 소요, 협동적 소유, 국가적 소유가 공존하면서 중앙계획보다는 시장기제에 의존하는 시장사회주의체제가 궁극적인 지향점인지, 또 시장사회주의가 역사진보의 중요 준거인 생산력발전, 계급착취 완화 및 소멸,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과연 어느정도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장기간의 역사적 실험을 필요로 한다.

비록 시장사회주의를 역사적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역사적 경험으로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잔존사회주의는 이 대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잔존사회주의 지도국인 중국이 선택하고 있고, 이제까지의 역사적 경험은 어느정도 국가사회주의의 누적된 문제점, 특히 생산력 발전의 측면에서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경제는 급속도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통합되고 있고, 시장사회주의 자체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접합 또는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잔존사회주의

의 개방과 자본주의 세계체제와의 접합 내지 통합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북한 역시 장기적으로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독일의 통일국가 사례비교 연구를 통한 한반도의 분단성격에 대한 규명은?

<출처: 김대중, 독일통일의 교훈과 우리통일의 방향과 전망, 1993>

1) 독일통일의 교훈

나는 유럽에 약 반년 체재하는 동안 세 번 독일을 방문했다. 그리해서 독일통일 성공의 원인, 그리고 흡수통일에서 오는 부작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는 데 힘썼다. 나는 독일통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통일에 있어서 언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 큰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2) 독일 통일의 성공 이유

첫째, 무엇보다도 서독이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에서 이룬 자유, 번영, 복지의 성공적인 내정발전이 통일의 튼튼한 기반을 이루었던 것이다. 독일통일의 성공요인을 논할 때 이 점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동독사람들이 서독을 동결하고 서독과 같은 높은 생활수준을 갈망하면서 조속한 통일을 이룩하고자 민중봉기에까지 나선 것이 대등한 통일 아닌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을 가능케 했다.

셋째, 서독정부가 동독을 흡수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극히 어려웠던 국제적 장애를 제거하고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 순조로운 통일의 원인이었다. 당초 영국, 불란서, 미국은 점진적 통일을 주장했다. 특히 소련은 급속한 통일을 반대했다. 그러나 서독은 소련에 대해서는 통일독일의 군비축소, 큰 규

모의 경제협력 제공 그리고 서독은 소련에 대해서는 통일독일의 군비축소, 큰 규모의 경제협력 제공 그리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의 강화 약속을 통해서 그 반대를 철회케 했다. 그리고 영, 불, 미에 대해서는 NATO에의 잔류, EC와 통일유럽에의 적극적인 참여 약속을 통해서 조기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3) 동독 흡수통일의 과정

첫째, 콜수상은 당초 89년 11월 28일자의 연설을 통해서 독일통일의 방식을 조약공동체, 국가연합, 연합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으로 할 것을 제안했었다.

둘째, 그러나 이것이 급속한 흡수통합형식으로 바뀌겼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동독인들의 급격한 통일에 대한 욕구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 고르바초프 정권이 불안정한데 이 정권이 망하기 전에 통일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권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 그리고 기민당의 당략, 즉 콜 수상이 통일독일의 초대수상이 되고 싶어 한 욕구를 들 수 있다.

4) 흡수통일의 부작용

사회민주당과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반대와 충고를 무릅쓰고 강행된 흡수통일은 지금 통일독일로 하여금 큰 진통을 앓게 하고 있다. 독일통일의 위대한 가치 그리고 장래의 큰 발전에 대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졸속한 흡수통일의 대가는 너무도 크다.

첫째, 막대한 통일비용이 지금 독일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2000년까지 10년 동안에 약 2조 마르크가 통일비용으로 들어갈 상황이다. 콜 수상은 당초 연간 통일비용이 500억 마르크면 된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는 매년 2000억 마르크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콜 수상은 4대 1의 실제 환율을 무시하고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를 1대 1로 교환해 주었으며, 서독 수준의 임금 및 사회보장정책을 동독에 실시하는 등으로 해서 동독의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격증하게 되었다. 외국인은 물론 서독실업가까지도 동독에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

속에서 동독경제는 지금 마비상태에 있고 계속 하강을 하고 있다. 900만의 동독 노동인구 중에서 약 400만이 실업자라는 엄청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셋째는 동서독이 40년 이상 분단된 데서 오는 엄청난 대립과 갈등을 통일독일은 겪고 있다. 지금 독일에서는 정치적 통합으로 외세에 의한 분단은 끝났지만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인한 내부분단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동독과 서독은 없어졌지만 동독인과 서독인은 엄연히 존재한다. 일등국민 서독인과 2등국민 동독인 간의 차별과 대립이 커지고 있다. 분단시대에는 1민족 2국가였지만 지금은 1국가 2사회의 현실이다. 이 모두가 조급한 흡수통일에서 온 것이다. 폰 바이체커 대통령은 나에게 말하기를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마음의 장벽은 그대로 있다.” 고까지 개탄한 바 있다.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는데는 적어도 1 - 2세대, 즉 3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 된 형편이다.

넷째, 급속한 흡수통합의 결과 서독시대의 활력과 유럽에서의 주도권에 동요를 가져오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 정부부채의 격증, 실업자의 급속한 증가는 지금 통일독일 독일의 현실과 장래에 암염을 던져주고 있다.

5)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첫째,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통일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통일에 있어서는 불 같은 정열과 더불어 어둠 같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신중하고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독일이 전쟁범죄국가로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던 통일을 그토록 급속히 이룩할 수 있었던 요인을 깊이 음미하고 배워야 한다. 이미 말한 대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독일이 튼튼한 민주기반을 서독내에 닦는 데 성공한 것에 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었다. 이 힘을 가지고 동독의 선망의 대상으로서 서독이 인력을 발휘했으며 동서유럽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교훈이 된다.

셋째는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을 우리는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독에 비해서 경제력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서독은 동독에 비해서 인구가 4배로서 4사람이 1사람을 먹여살리면 되지만, 우리는 북에 대해서 2대 1밖에 되지 않는다. 서독은 동독에 대해서 국토가 배 이상이지만 우리는 북한보다도 국토가 20%가 적다. 서독이 이러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은 후유증을 앓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는 동서독과 달리 동족끼리 전쟁까지 해서 아직도 휴전상태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간에 어떠한 교류도 제대로 한 바가 없었고 지금도 서로 적대심과 부정적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조급한 흡수통합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넷째, 독일통일의 교훈은 우리에게 단계적이고 착실한 통일만이 바람직한 일이고 성공의 길이라고 가르쳐 준다. 나는 지난 20여년 동안 3단계 통일방안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 독일통일,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유럽통합의 진전과정 등을 보고 나의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했다. 또 내가 만난 많은 전문가들, 정치인 그리고 행정관리들도 이러한 단계적 통일방안을 적극 권장했다. 나의 반년간의 유럽체재는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한 생생한 실물교육을 나에게 해 주었다는 점으로 참으로 유익했다.

3. 남북한 정치·문화·군사·경제에 대한 연구는?

< 출처 :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 1993 >

1) 영토·인구

우리나라의 국토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부에서 남으로 튀어나온 한반도와 크고 작은 3,900여개의 부속도서 및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과 남쪽은 동해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열도와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과 북쪽은 황해와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대륙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방과 접하고 있다. 북한 지역은 위·경도상으로 동단은 함경북도 성봉군 우암리(동경 $130^{\circ} 41' 32''$), 서단은 평안북도 용천군 바단섬(동경 $124^{\circ} 10' 47''$), 남단은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북위 $37^{\circ} 41' 00''$), 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북위 $43^{\circ} 00' 36''$)이며,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2,062㎢의 55%인 122,762㎢이다.

한반도 남북의 총길이는 약 1,100km이고 동서의 길이는 좁은 곳이 200km, 넓은 곳이 320km이다. 해안선의 길이는 총 8,593km인데, 이중 북한지역의 해안선은 2,495km이다. 국경성은 총 1,376.5km로서 중국과는 1,360km, 러시아와는 16.5km를 각각 접하고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1945년 해방 당시 6도 9시 89군이었으나 1952년 12월 행정체계 및 구역개편을 통해 4단계 행정구역체계인 도(특별시)→ 시·군(구)→ 읍·면→리(동)의 행정단위 중 면을 폐지하여 도(특별시·직할시)→ 시·군(구역)→ 읍·리(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구역 체계로 개편하고 군지역을 재분할하여 그 수를 증가시켰다. 특히 북한은 광산, 임업사무소, 공장·기업소 등 특정지역에 상주인구가 집중되어 하나의 집단 취락지구가 형성되면 그곳에 '노동지구'를 설치하였다. 1992년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은 9도, 1특별시, 2직할시, 24시, 147군, 39구역, 4,242리·동, 147읍, 228노동자구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1964년 이후 인구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외 관련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바에 의하면 총인구는 1992년 현재 한국 인구 4,366만 3000명의 절반 수준인 2,233만 6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방 직후의 926만명에 비하면 약 2.4배가 증가한 숫자이다. 인구증가율은 1960년대의 3%대, 1970년대에는 2%대에서 1.40%로 계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조출생률·조사망률은 각각 22.4%, 7.1%로 높은 편이다.

북한의 인구밀도는 1992년 181.9명으로 한국의 439.8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나 1965년 당시 북한 100.2명, 한국 291.5명이었던 사실을 감안해 보면 남북한 모두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는 한반도 전체의 인구밀도가 297.2명으로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1965년의 36.1%에서 1991년에는 74.8%로 늘어나 전전세대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성비는 6.25등의 영향으로 1965년에는 100.0:95.6으로 여자가 많았으나 1992년에는 100.0:100.0으로 남녀동수를 기록하고 있다.

장래 추계인구는 2000년에 2,474만 6,000명, 2020년에는 3,000만 명을 바라보는 2,994만 4,000명이 될 것이며, 이때 남북한의 전체 인구는 8,000만 명에 육박하는 7,952만 2,000명으로 추정된다.

2)정치·군사

북한의 권력구조 및 체계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정치조직에 대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입법기관이자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집행기관으로 내각에 해당하는 정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의 당대회는 5년마다, 전원회의는 6개월마다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대회는 1980년 10월 제 6차 대회 이래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조선노동당의 핵심부서로는 정치국·비서국·중앙군사위원회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서국 산하에는 22개의 전문 부서가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3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행하는데 산하에 대의원 자격 심사위원회,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등이 있다.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정무원은 행정집행업무만을 담당하며, 현재 15위원회, 28부, 1원, 1은행, 2국 등 총 47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GMP의 20~25%를 군사비로 사용하여 왔다. 병력·장비 등 군사력 규모를 기준으로 한 1991년 북한의 실질 군사비 지출규모는 55억 6000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과다한 군사비 지출은 고질적인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GMP 대비 군사비 비율은 24.3%, 1인당 군사비 지출은 약 232.9달러이다. 군사비의 막대한 투입으로 인해 1992년 북한은 세계 제 5위의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육군 88만 2000명, 해군 4만 6000명, 공군 8만 2000명으로 현역만 해도 10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사장비에 있어서

도 북한은 전차 3,700대, 전투함 445척, 전술기 850대로 육해공군에 걸쳐 한국을 양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 6차 대회 총회보고에서 김일성이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자주·친선·평화'라고 표방하고,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를 '반제 자주역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 운동의 확대발전'에 둔 아래 비동맹 제 3세계국가는 물론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발전에도 주력하여 왔다.

1992년 12월 말 현재 북한과의 수교국은 총 128개국으로서 1963년 10개국, 1971년 37개국, 1980년 100개국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남북한 동시 수교국은 117개국이다. 지역별 수교현황을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9개국, 미주 지역의 20개국, 구주 지역의 32개국, 중동 지역의 14개국, 아프리카 지역의 42개국과 국교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은 1973년 6월 23일 한국이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자 같은날 『조국통일 5대강령』을 발표하면서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을 제안, 종래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유엔 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북한은 1973년 9월 5일 유엔 본부에 상주대표부를 개설하였고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사무국에도 상임 읍서비 대표부를 설치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각종 유엔 산하·전문기구 및 정부간 국제기구에도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회원국 가입에 있어서는 남북한 단일의석하에 공동가입을 주장, 남북한 동시가입을 거부하여 오다가 결국 날로 심화되는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1991년 9월 18일 제 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동시가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2년 12월 말 현재 북한은 1개 유엔 산하기구, 11개 유엔 전문기구, 10개 정부간 기구에 가입해 있다.

3) 경 제

북한의 국민소득을 GMP 개념으로 추정하는 몇 가지의 방법 가운데 1990년부터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은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른 추정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1991년도 북한의 경상 GMP는 229억 달러, 1인당 GMP는

1,038달러로 추정되어 경상 GMP는 한국의 1/12, 1인당 GMP는 한국의 1/6수준이다. 특히 1991년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5.2%로 나타나 전년도의 -3.7%보다 더욱 악화됨으로써 경제침체의 가속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1년 북한의 생산가능연령 인구는 1,487만 2000명, 경제활동 인구는 1,008만 3000명, 경제활동 참가율은 45.8%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의 43.9%를 능가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경제구조가 노동의존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테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분되는데, 통상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년도 결산과 당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한다. 1991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3차 회의에서 발표한 1991년도 결산보고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1991년도 총예산규모는 세입이 172억 달러로서 재정규모는 세출기준으로 한국의 40.3%에 불과하나 재정부담률은 75.1%로 한국의 15.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국내총생산(GMP)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1991년 농·임·어업 28.0%, 광공업 42.9%.건설업 8.2%, 서비스업 20.9% 등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 비해 농·임·어업과 광공업 부문이 높은 반면 건설업과 서비스 부문은 낮은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경공업·건설업·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있는 것은 주민 후생수준의 낙후를 반증하고 있다.

북한의 수송시설은 지리적인 제약조건과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시설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수송물량의 80% 이상을 철도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은 철도 전철화 및 광궤화를 통해 청도 수송능력을 높이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집중하여 왔다. 1991년 북한의 철도 총연장이 1990년보다 14km, 전철총연장은 86km가 늘어난 반면, 도로 총연장은 23,000km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제 3차 7개년 계획기간부터 적극적인 무역확대정책을 추구하기 시작, 계획기간 중 연평균 18% 이상의 무역증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동구 및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따른 대외협력기반의 와해와 해외

시장의 상실에 따라 1990년 이후 무역규모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북한의 1991년도 수출·입 규모는 전년비 41.4\$가 감소된 27억 2000만 달러로 한국의 1/56 수준으로 추정되며, 수출 10억 1000만 달러, 수입 17억 1000만 달러로 7 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가격구조는 기본식료품 및 공공요금에 대한 저가정책과 가공식품 및 공산품에 대한 고가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극심한 물자부족으로 인해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암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암거래 가격이 구정소매 가격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쌀 1kg의 국정소매 가격이 27원(북한화 8전), 달걀 1개가 58원(북한화 17전)이나 이들의 암거래 가격은 각각 6,820원(북한화 20원), 1,023원(북한화 3원)을 호가하고 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시내버스·지하철·우편요금이 한국에 비해 낮은 반면 택시·장거리철도·국제전화 요금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임금은 직책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사무원이 기술직 보다 임금수준이 낮고, 당·정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녀차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1992년 2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전체 노동자·기술자·사무원의 생활비를 평균 43.4%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북한 사무원의 평균임금은 3만~3만 4000원(북한화 90~100원)으로 추정된다.

4) 문 화

북한의 언론매체에 부과된 유품가는 임무는 노동당 정책과 혁명사업을 선전, 응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모든 언론기관은 노동당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조직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폐쇄적이고 획일적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신문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정무원기관지 '민주조선', 사로청기관지 '노동청년'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당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12개의 지방지가 있으며, 영자지로는 주간으로 발간되는 'The Pyongyang Times'가 있다.

라디오 방송으로는 대내외용인 중앙방송과 대남 선전용인 평양방송이 있으

며, 특수방송으로는 대남 선전용인 구국의 소리 방송, 대남 청소년 심리전용인 평양 FM 방송이 있고, 그 외 지방방송으로 해주방송 등 11개국이 있다.

텔레비전 방송으로는 북한 전역을 가시권으로 하고 있는 조선중앙 TV, 평양 근교에서 토·일요일에만 시청할 수 있는 만수대 TV, 대남선전용으로 평양 이남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개성 TV 등 3개국이 있으며, 통신사는 조선 중앙통신사가 유일하다.

북한은 1992년 4월 개정된 헌법 제 68조를 통해 종래 ‘반종교선전의 자유’ 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유화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며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고 착취·억압하는 도구”라는 부정적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 ‘종교 부재의 땅’이라는 국제적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이후 교회·성당 건립, 사찰 복원, 각종 종교행사 개최 등을 추진, 현재 교회 2개소(봉수교회, 칠골교회)와 성당 1개소(장충성당)를 비롯 60여 개의 사찰이 있다. 신도수는 불교 1만여 명, 기독교 1만여 명, 천주교 8백여 명, 천도교 1만 5000여 명이 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국가적 명절’과 ‘민족적 명절’이라고 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국경일의 경우 소위 ‘8대 국가명절’이라고 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정권창건일, 노동당창건일 등을 말하고, ‘민족적 명절’은 설·한식·단오·추석 등으로서 1988년 이후부터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적 명절’의 경우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휴무일을 전후한 일요일을 선정하여 보충노동을 해야 한다. 국경일 및 공휴일 총수에 있어서 북한이 12개 15일, 한국이 12개 17일로서 비슷한 수준이며, 신정·설·광복절·추석은 남북한의 공통 명절 및 국경일이다.

북한의 대부분 공연장은 그 시설 규모가 대단히 큰 것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로 공연되는 ‘혁명가극’이나 ‘혁명연극’들의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수백명에 달하는 대작물로서 무대가 특히 넓고 음향이나 조명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표적 예술공연장인 만수대예술극장은 관람

석이 4,000석이나 되며, 이 밖에 3,000석 이상 공연장으로는 교예극장·동평양대극장·함흥대극장·국제영화회관 등이 있는데 대부분 평양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체육시설 역시 집단체조, 정치선전 집회 등을 위해 대형화되어 있고 평양에 집중되어 있다. 옥외경기장으로는 김일성경기장이 10만 명, 5·1경기장 '이' 15만 명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으로는 '평양체육관'이 2만 100명으로 최대를 자랑하고 있다. 잠실의 올림픽 주경기장의 수용 능력이 7만 명임을 감안하면 체육시설의 대형화 정도를 알 수 있다. 북한은 1984년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안골체육촌을 건설하였는데, 수용능력은 총 10개소에 5만 8500명이다.

4. 각 종단의 통일 운동 경과는?

< 출처 : 종교인 협의회 창립총회 자료집, 1992 >

가. 각 종교

1) 천주교

(1) 한국천주교회는 1965년 이미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확정하고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제정하였으며 『북한선교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반공주의를 분단구조 인식의 근거로 삼는 보수적 입장을 지속 해 왔다.

(2) 1984년 고 마태오 신부가 개인자격으로 방북하여 북한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1991년에 이르러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개칭하고 '공동 참회예절', '대축일 합동미사' 등 대북 5개항을 제안한다. 이제까지의 입장을 수정하여 진보적 성격을 갖기 시작한다.

(3) 『정의구현사제단』은 훨씬 진보적인 입장과 행동을 보여 왔다. 1988년

부터 통일과 관련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급기야 문규현신부를 북한에 보냈고 1988년 6월6일에는 남북한 동시개최 통일염원미사를 드리기에 이른다. 북한 장충성당에서 문규현신부가 집전했고 남한 임진각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천주교 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서명운동과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90년 사제단이 방북을 제의했고, 「조선천주교인협회」는 환영매시지를 보냈다. 이후 매년 6월 또는 8월마다 ‘통일염원미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통일문제 세미나 등을 개최해 오고 있다.

2) 불교

(1) 종단협 내에 「남북한불교교류협의회」와 「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으나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불교계의 통일운동은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8월 15일에 교구본사를 포함하여 불교계 45개 단체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남북불자 공동기원 법회’를 개최하였다. 그 성과를 이어 불교본부 참여 단체를 주축으로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를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통일협」은 대단히 진보적이고 전위적인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나, 소위 공안정국시절 의장 지선스님이 구속되는 등 활동을 제약 당해왔다. 그러나 1990년에는 ‘통일염원 한가위 북한 불교 순례단’을 조직하여 북한 불교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전진을 계속한다. 남-북-해외 합동법회를 추진하였으나 「통불협」만 제외된 채 미국에서 간담회로 치루어진 후 남북 불교교류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통불협」을 중심으로 하는 확산운동은 꾸준하게 전진하고 있다.

(4) 불교계 통일운동은 불교대중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실천적으로 제고시켰고 청년불자들의 조직적 진출을 이루어 냈다. 대중과의 결합폭이 넓

어져 불교 내부에서 그 지위를 확고히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수준으로 상승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와, 종단 내 다양한 통일행사의 내용을 채우고 책임있게 지원하는 일과, 최근의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통일사업 기획이 충분치 못하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3) 기독교

(1) 1978년 한국과 일본의 교회가 협의회를 개최했을 때 비로소 통일문제를 공식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한다. 1984년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일본에 협의회를 마련하고 남북교회를 초청하였으나 북한교회는 축전만 보내고 참석치 않는다. 1986년 스위스에서 남북교회 지도자들이 분단 이후 첫 상봉을 했고 성례전을 갖는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선기독교도연맹』과 꾸준하게 접촉하고 있다. 『한교협』은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의 선언”을 채택했고 동 선언채택을 통해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하게 된다. ‘회년’은 구약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정언적 명령을 이행하는 해를 말한다. 왜곡, 부정의, 불평등, 부자유하게 된 현실을 그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해를 ‘회년’이라 한다. 『회년준비위원회』와 『나눔운동본부』를 결성하였으며 거의 모든 교파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3)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 『정의평화실천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거의 모든 운동체들은 『한교협』과 긴밀한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참여와 독자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문익환 목사의 돌연한 방북 이후 여러 성직자가 구속되어 통일운동이 위축되는 듯 했지만, 그러나 대중화와 운동의 요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확산시키는 효과가 더 컸다.

(4) 교회의 상층 지도력들이 통일운동에 비교적 적극적인 것이 비판의 표적이 될 수는 없으나, 그것이 교회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지 못하

는 결과를 빚고 있다. 기독교 내 각 교파의 연대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천주교 등 타 종교와의 연대는 물론 비 종교단체와의 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통일운동이 전문성을 중시하고 운동성을 경시하는 경향에 빠져 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운동성을 담보한 전문성이어야 하며 전문성이 있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반성이다.

* “남북 인간띠잇기”대회가 1993년 8월 15일에 독립문에서 판문점까지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기원 하였다. 대회 본부에서는 내년 광복절에는 대전에서 평양, 오는 95년에는 백두산에서 한라산을 잇는 인간띠 대회를 북측에 다시 제안한다는 계획이 있다.

4) 천도교

(1) 최신덕 이름으로 오익제 교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서신 및 발송

(1989.6.5)

(2) 천도교 남북교류 추진위원회 구성 발족 (1989.6.18)

(3) 대북 제의 (1989.11.20)

1990.4.5 천일기념 합동 봉행, 정신혁외 북한 교역자 20명 서울 방문초청

(4) 서신교환 (1990.4.20)

재미교포 박의정이 평양을 방문 오익제 교령과 정신혁 위원장의 서신교환

(5) 방북 제의 (1990.10)

천도교의 북한 방문단 33명을 구성하여 1990.12.24 인일기념식을 평양에서 남북 합동 봉행 북측에 제의

(6) A·C·R·P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회의 참가

1991.10.28 - 11. 1 네팔 카투만두에서 개최

북측 정신혁 위원장, 남측 임운길 교화관장 회동

(7) 대북 제의 (1991.12)

1992년 천일기념 합동 봉행 (정신혁외 10명 서울 방문초청)

(8) 대북 제의 (1993.2)

1993년 천일기념 합동 봉행, 동학혁명 100주년 행사 공동추진협의

(9) 대북 제의 (1993.6)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행사의 공동추진과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10월 하순경 개최하는 국제학술 대회에 정신혁 위원장과 북한학자 10명이내 서울 초청

나. 종교계 통일운동의 효과

1)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반공에 있어서는 단세포적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구각을 깨고 민족통일을 과제로 받아드리는 자기 개혁을 이루었다. 이 사실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2) 공기구는 보수성을, 재야적 운동체는 진보성을 더 띠고 있는 형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말한다면, 종교계는 보수적이고 반공적인 초기태도를 지양하여 보다 진보적이고 공생을 추구하는 민족대단결로 나아가게 되었다.

3) 대부분 신자들이 30여년 이상이나 동족이 아닌 원수로 인식해 왔던 북한을 결합해야 할 민족구성의 일원으로 받게 되었다.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으며 적대감을 불식해야 된다는 생각을 폭넓게 갖게 되었다.

4) 재야적 통일운동이 사실상 신자들이 통일의식을 끌어 올렸고 정권의 잘 못된 대북정책을 분쇄하고 돌파했다.

5) 동시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통한 평화 실현이 우리의 역사적인 과제이며 동북아세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게 되었다. 이것은 곧 민을 통일주체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6) 각 종교계는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넘어서기 힘든 벽에 부딪치게 되면서, 비로소 민족의 화해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인권-민주화-통일은 서로 상대를 내포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경험을 우리는 모두 공유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화를 전제하지 않는 통일 지상주의를 주장하지 않으며, 통일 없이도 민족 구성원 모두의 궁극적인 인권과 민주적인 사회건설이 가능하다는 선민주를 주장하지 않는 분명한 입장을 갖게 되었다.

5. 각 종단의 통일에 대한 제언은?

1) 불교의 제안

(1) 교류조직체들의 연대

지금까지 남북교류를 성사시켜온 종교계, 여성계의 조직들이 연대하고 나아가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은 민에 의한 통일운동의 가능성과 물꼬를 트는 성과를 올렸다. 이것을 전체통일운동으로 집결시켜 통일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종교계의 협의기구 구성

앞 항에서 밝힌 제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선 종교계의 협의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교계내 다양한 세력과의 원만한 관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종교인들이 민족민주운동에 보다 올바르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운동을 종교계 내에 보다 대중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범민족 대회에의 참여

“정부의 온갖 탄압과 대중들의 무관심을 뚫고 통일 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범민련』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린다. 그러나 『범민련』은 “현재적 한계”가 극복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종교계가 금년 범민족 대회에 참가하여 대중성을 높이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범민련』을 보완해야 한다.

2) 천주교의 제안

(1) 민의 대안제시

남북정부 당국자간의 합의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건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때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호 협력하고 또는 견제하여야 한다.”

(2) 민간통일기구의 구성

“각 단위통일운동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대안마련, 실천을 위한 협의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북핵문제, 군축등 구체적 현안문제들을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게 되어야 한다.

(3) 『범민련』과 학생중심운동의 보완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긍정적으로 받으면서도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통일운동이 학생운동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연유가 있었으나, 하여간 그들의 운동을 민간 차원의 조직으로 확대하여 민의 운동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3) 기독교의 제안

(1) 민중참여의 확대

그동안 남북의 민간교류에 기독교가 일익을 감당하고 큰 성과를 가져왔으나 자칫 상충 지도력이 주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되어야 한다. 민이 주체가 되는 방안이 연구되고 실천 되어야 한다.

(2) 통일운동의 운동성 제고

통일이 모든 면에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 차원에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민족이 하나되는 운동성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정책전문기능을 가진 정부를 뒤 따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통일운동은 운동이어야 하며 정책기능을 앞질러야 한다.

(3)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가칭)구성

“종교간에 통일의 원리를 공유하고, 함께 찾은 과제를 함께 추진하며 저해 요인제거를 위해 함께” 일하는 협의회가 필요하다. 통일의식을 더욱 폭넓게 확산시키고 참여의 길을 함께 찾고 실행하는 종교간 연대가 필요하다.

6. 평화통일에 기여할 원불교의 역할

평화통일은 우리의 현실속에서 결정되는 문제이면서 우리의 현실은 평화통일의 부정적요인과 긍정적요인이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노력은 부정적요인을 제거하고 긍정적요인을 더욱 다지고 성숙시켜 나가는 작업이며 이러한 작업은 정치인만의 임무도 아니요. 정부만의 임무도아니며 사회 각 계층과 각 분야가 각각 그내에서 작업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통일의 대로를 밝혀 제시하고 있다. 이에 종교계에 서로 하여야 할 임무가 따로 있다. 본교 역시 본교 나름대로 담당해야 할 임무를 교리속에서 찾아 제시하여 원불교인의 역할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1) 종교는 상수도 역할을 해야

종교는 진리와 자비와 윤리를 보다 선명하게 하였다가 끊임없이 이 피안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상수도가 되어야 한다. 상수도가 오염되면 사회는 함께 오염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의무는 신중한 것이다. 만일 종교에서 비진리, 무자비, 비윤리가 횡행 한다면 이것은 종교사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될것이다.

그러므로 본교에서는 이 모든 진리와 자비와 윤리의 원천인 진리불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수행의 표본으로 하면서 비진리적 요소를 제거하는 즉 착각된 진리관을 바루어 왔으며 자비의 정신을 일깨우고 새시대의 윤리를 재 구성하여 교도들에게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전교도로 전국민에게로 확산시켜서 존엄하신 진리의 모습이 부각되고 자비와 윤리가 충만한 사회가 된다면 밝은 사회, 따뜻한 사회, 깨끗한 사회로 전환될 것이니 이것이 우리 원불교인이 역할해 주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가 될것이다. 이 진리의 모습을 재 인식하게 되면 그동안 착각된 환상으로 부터 해방이 되어 통일 기반 조성에서 사상적 기초가 다져질것이다.

2) 상극의 대립논리를 상생의 恩의 논리로

원불교 교리 가운데 사은론이 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우리 인간이 접하고 있는 모두를 망라하여 거기에서 관계된 근본적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보은 하도록 啓導하고 그리하여 이러한 정신을 집약한 표현으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고 매일 같이 암송한다. 이 교리가 현실속에 도사린 상극의 대립논리를 상생의 恩의 논리로 전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문명환경의 늪속에서 사는 현대사회에서 상극의 대립의미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바로 파괴와 파멸을 의미한다. 싸움도 맨주먹의 싸움은 그렇게 심각하기까지는 않는다. 그러나 칼부림의 싸움은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그런데 현대는 칼만 있는 것이 아니요, 총이 있고 대포도 있고 폭탄 내지 핵폭탄까지 있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상극의 대립자세는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아니면

둘다 죽는다는 뜻이다. 현대사회 구조는 서로 다른 입장끼리 서로 얹혀서 상부상조가 되는 속에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한 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극의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것은 시대착오로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노사의 대결,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상과 사상에 대결로서 무엇이 해결되고 있는가. 대결이 전개되고 있는 곳마다 정체나 살상이나 파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교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주창하시고 상생의恩으로 재구성 하시려는 구상이셨다.

이에 본교는 평소에도 여와 야사이 국민과 정부사이 노동자와 사용자사이 국가민족과 국가민족 사이에 뛰어들어 상생의恩의 관계로의 전환에 노력할 것이다. 더우기 남북접촉의 결정적 시기에 상생의恩의 관계로 형성해 가야 할 과제는 신중한 사명을 느끼며 이에 큰 역할을 대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을안 한이치 한집안 한권속이 한일터 한일꾼이라는 원불교 삼동 윤리정신을 우리 민족에게 주지시켜서 민족화합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합리사회에로의 전환

본교교리 가운데 사은편이 있다. 여기에서는 과거 사회의 불합리를 낱낱이 진단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항들을 열거했다.

이것은 불합리한 사회를 합리사회에로의 전환을 추구한 것이다. 즉 자력생활의 자세, 배우는 자세, 가르치는 자세, 봉공의 자세를 바루어 주므로서 모든 불합리를 사회질서 속에서 합리로서 사회개발과 발전을 촉진하려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주어진 직장, 가정, 사회에서 아직도 잠복한 모순이나 불합리를 일깨우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속에서 어떤 전통적 권위나 만우성이 역사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또는 架空的, 盲信主義가 합리적 사고를 저해하여 시간낭비, 노력낭비, 경제낭비를 자아내어 국가의 발전을 정체하게 만들었고 때에 따라서는 율곡의 실학적 실국강병책 같은 것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

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리운동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이 나라 방방곡곡에 인권과 지성과 교육과 공공복리가 충만한 사회로의 전환을 기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국민성장들의 인격관리

원불교 교리 가운데는 인격관리의 방식으로 삼학이 있다. 정신주체를 확립하는 정신수양, 슬기로운 지혜를 개발하는 사리연구, 의로운 용기를 단련하게 하는 작업취사등이 그것으로 인격의 근원적 틀을 형성하므로서 하나하나의 인격을 성숙시켜 나가려는 방안이다. 하나의 인격은 국가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세포이다. 하나 하나의 세포관리의 무질서가 세포를 좀먹게 하고 하나 하나 세포의 이상현상은 바로 전체 신체로 과급되어 생존문제까지 위태롭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국사의 운영주체로 인격체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국민 하나하나의 인격은 바로 국력과 직결된다. 인격적 결함이 우리 국운을 파멸로 몰고 간 사례도 수 없이 많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수 없이 많다. 그러므로 현명한 지도자는 인격관리에 관심이 깊다. 훌륭한 국민은 인격교육의 비중을 중요시 한다. 오늘날 유태인의 인격교육은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원불교에서는 이러한 삼학공부를 정기와 상시훈련의 방식이나 특별 기간까지 설정하여 인간개조 마음개조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여 훈련화 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통일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인격을 항상 대비해 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온 국민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면 우리의 국력은 반석위에 놓이게 되고 우리의 생활환경은 “착함”으로 가득한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불교인은 신앙적 혼을 바쳐서 이 삼학의 교의를 구현 하므로서 전체 국민으로 까지 인격관리를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을 위하여 원불교는 초창당시 부터 새 생활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종교적 교의의 구현을 위해 신자들의 정기훈련 기간을 설정하여 특별훈련을 실시하는 등 종교적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운동과 정책방침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교세가 미치는 영향권에서는 계속 전개 될 것이다.

특히 통일의 결정적 시기에는 발벗고 나서서 북한 국민들을 맨투맨 작전으로 관리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참고문헌

1. 배은하, 북한과 남한의 통일정책,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1991
2. 강정구, 세계사적 전환과 통일운동의 접합, 창작과 비평, 1992
3. 정대화, 남북합의서의 역사적의의와 통일전망, 사회평론사, 1992
4. 한국교회환경연구소, 남북한 핵사찰 어떻게 되어가나, 평화와 환경, 1992
5. 김대중, 독일통일의 교훈과 우리통일의 방향과 전망, 1993
6.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 1993
7.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1993
8. 종교인 협의회 창립총회 자료집, 1993
9. 이광정, 평화통일에 기여할 종교인의 역할, 1990